

한전공대 2022년까지 차질없이 설립될 듯

청 관계자 "모든 지원할 것...위치 등 외부 영향 미쳐선 안돼" 송갑석 의원 "총 1000명 규모...국·공유지 불하 받는게 도움"

한전 공대가 오는 2022년까지 차질없이 설립될 전망이다.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 논란과 관련 "최근 한전 공대 설립 문제와 관련, 한전 사장을 만났으며 오는 2022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에서는 한전 공대 설립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전공대는 한

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립해야지, 규모나 위치 등에 대해 외부의 영향력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 공대 설립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잡음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지위 소속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한전 측에서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등 총 1000명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한전 공대를 차질없이 완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전 측에서는 한전 공대 설립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는 교육부 등 일부 부처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풀이되고 있어 당·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전 공대를 설립하는 것은 토지 보상 등으로 시간과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며 "오히려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것이 한전공대의 조속한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전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전 공대 부지 문제와 관련, 송 의원은 "한전공대의 성격에 따라 부지는 유동적일 수 있다"며 "무조건 크게 짓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송 의원은 내주 국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 등 한전 경영층과의 면담을 갖고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 벨리 조성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폭염에...전남 해수욕장 피서객 25% 줄어

55곳 100만명 찾아 2년 연속 안전사고 제로

올 여름 전남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100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지난 27일 폐장한 것을 비롯해 전남지역 55개 해수욕장이 53일간의 운영을 끝내고 폐장했다. 지난달 초부터 차례로 문을 열었던 전남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모두 99만 51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완도지역이 50여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20여만 명, 고흥 6만 여명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132만6193명)보다 33만여명(25.0%) 가량 줄어든 수치다. 157만여명을 기록했던 재작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크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

서객이 내리찍는 해수욕장 보다는 전남 지역 하천과 계곡 등으로 피서객이 몰린 데 따른 것이라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다행히 올 여름 전남지역 해수욕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안전사고 제로(0)'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도가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과 소방, 안전관리 요원을 지난해 보다 245명이 늘어난 453명을 배치하고, 구명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장비를 갖춘 게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의료사업 대거 국비 반영

뇌연구센터 설치 등 4건 99억...미래 먹거리 부상

광주 의료산업 관련 사업 4건, 99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의료산업은 기술개발과 함께 시장규모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향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확정된 2019년 정부예산안에 광주시가 요청한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 사업(15억원) ▲한국뇌연구원 광주협력연구센터 설치(15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57억원) ▲의료로봇 성장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1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180억원을 투입해 안과 의료기기 관련 기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 지원을 한다. 한국뇌연구원 광주협력연구센터 사업

은 115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5년간 중장기 차세대 연구 기반 조성에 들어간다. 또 이미 확보된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술 및 특허를 기반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에도 2023년까지 각각 288억원·440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시는 예산 신규 반영을 토대로 정부 지원이 전무했던 바이오 화장품 분야 육성을 위해 '바이오 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 의료산업 규모는 2013년 175개사 매출액 2822억원 고용인원 1049명에서, 지난해 367개사 매출액 4466억원 고용인원 2735명 등 연 11.1%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홍보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이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광주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도 없이 추경 반영

시의회, 월봉서원~문화전당 연계 문화기반 체험동 등 5건 지적

광주시가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했다가 광주시의회를 지적 받았다. 2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2018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안 중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5건 포함됐다.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스마트시티 조성 실증 상

용화 연구기술지원(56억원), 라이더융합 산업상용화 기술지원(6억원), 지역VR 제작지원 센터 구축 콘텐츠 개발지원(32억원) 등이다. 또 시의회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지적한 예산은 월봉서원~문화전당 연계 문화기반 구축 체험동 숙박동 건설(20억원), 평송산단개방형체육관 건립(10억원) 등이다. 특히 월봉서원~문화전당 연계 문화기반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84억원의

중양심사 대상이지만 지난 6월 정기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전 동향파악 결과 조 건부 의결로 심의 중'이라는 동향파악만으로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 현황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시의회 예산결위는 지적했다. 또 평송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도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지만 역시 투자심사 이행 사업 목록에서 제외됐다.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투자심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이 낮은 투자의 억제와 투자 사업

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2년 도입됐다. 하지만 매년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전 절차인 투자심사 누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위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한 사전 절차 없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예정돼 의회 예산안 제출 이전에 회신을 기대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8월 23일 회신될 예정이다"면서 "향후 사전절차 이행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악질 고액 체납자 뿌리 뽑는다

9월 15일~12월 15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29일 광주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3명이 체납한 123억원이 집중 징수 대상이다. 광주시는 이 기간에 체납기동반 운영, 각종 재산과 채권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압류물건 공매 등을 확대·강화한 다는 방침이다.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

호판 영치, 삼승자동차세 체납차량 공매 처분, 각종 재산압류 등 전방위 처분도 한다.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법안에는 분납이나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악질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관리팀을 확대 운영한다. 또 공공빅데이터 분석모형을 활용해 회수 가능성이 큰 그룹과 작은 그룹으로 나눠 작은 그룹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건부에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